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10월2일(금)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37)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37) ... 2

(11시2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운영위의 이 엄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간사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님들 잘 모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22분)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숙려기간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위원** 표결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것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결 절차입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3인 중 찬성 16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37)

(11시23분)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5·18 왜곡과 폄훼 시도에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나왔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정치적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란수괴, 내란수괴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이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총칼로 수많은 광주 영령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의 한맺힌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어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역사적 사실 앞에 재조명도 재평가도 왜곡의 다른 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상급심에서도 내란이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위험천만한 시도가 반복될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파를 떠나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당사자인 김태규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김태규 의원께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소명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관례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병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먼저 손 들어 주셔서요, 말씀 듣고.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님 먼저 해 주시면 됩니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김일성을 지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사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로 한 얘기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민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얘기였는데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검열하는 정당이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소위 언제부터 이렇게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되었는지 우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확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준비된 연설문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토론 도중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내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열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후보의 경우에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부인했을 때에도 그 당시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판결은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백을 줘야 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일 가운데서 얼마나 부정확한 얘기들로 특정 인

물들을 비화해 왔는가 얘기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할 당시에 분변 사건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했지만 박상용 검사가 민사소송한 결과를 보면 분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박상용 검사와 아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하기도 했던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분변 사건을 얘기한 개인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이 있다라는 이유로 거짓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특정 개인들의 말을 검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단 하나의 말을 가지고 ‘의원을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 정당이나,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위원장이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검열이다, 구구절절이다, 박상용 검사, 박원순, 입틀막, 이게 지금 5·18을 폄하하고 전두환을 옹호한 내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민전 위원 토론회에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주희 위원 방송에 나가서 대변인이 말하는 게 토론회입니까?

○박정현 위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이주희 위원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한병도 토론회에서가 아니고요. 이걸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칼로, 수많은 누군가의 가족이 총칼에 쓰러져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가 헌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반란수괴, 내란수괴로 무기징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명령들의 죽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건 성격 자체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엄히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전 위원 대법원의 판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금주 위원 국회의원이려면 최소한의 헌법 가치는 수호해야지요!

○위원장 한병도 전용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백골단 국회에 데리고 왔을 때 딱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김민전 위원 그게 입틀막입니다, 바로.

○전용기 위원 백골단 딱 데리고 왔을 때……

- 김민전 위원 입틀막이에요. 백골단이……
- 최수진 위원 여기서 백골단 얘기가 왜 나오니까?
- 문금주 위원 얘기 들으세요!
- 박정현 위원 창피한 줄 아십시오!
- 전용기 위원 그때도 그런 표현의 자유라고 해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 보여 드릴게요. 국회에 백골단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 김민전 위원 결성되기도 전입니다. 결성되지도 않았는데……
- 전용기 위원 백골단 결성되기 전이라서 팬썰아요? 그러니까……
- 김민전 위원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 임미애 위원 무슨 거짓말입니까?
- 문금주 위원 다 봤는데 누가 거짓말입니까!
- 전용기 위원 전두환의 비서실장인 허화평을 국회에 데리고 오고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원내수석대변인이지요?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토론회 나가서 ‘전두환은 내란 안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오히려 나서서 ‘대변인직 사퇴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두환 인정하는 겁니까?

- 김민전 위원 내란 안 했다가……
- 문금주 위원 김민전 위원님, 얘기 들으세요.
-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 문금주 위원 김민전 위원님 들으세요!
- 전용기 위원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주장을 하면서 의사진행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서 서울집회에 나가서 할 수 있다는데 내일 국민의힘 집회 가시니까요 가서 전두환 만세 외치십시오. 우리 검열 안 할게요. 우리가 뭘 검열합니까? 그렇게 떼뻗하면 내일 집회 나가서 전두환 만세 외치십시오. 표현의 자유 인정하겠습니다.

수석대변인이 공식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그걸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이러니까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보고 ‘국민의힘보고 내란 정당, 내란 정당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공식 대변인 입장 아닙니까? 본인들이 전두환을 계승하고 있는데 내란 정당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영화 보고는 역사 왜곡은 패륜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내란 부정에는 맥락을 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보고 납득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잘못했다고 하는 인정도 없고 철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오해했으니까 당신들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나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 왜곡을 경고하고 내란을 부정했다고, 그

러니까 왜곡을 막겠다고 스스로 왜곡했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사진 보십시오. 이것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군인이 시민을 총을 쏘고 몽둥이로 때려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수의를 입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것 수석대변인이 말실수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사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전용기 위원 수석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을 징계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정당, 내란 정당 본인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셔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윤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오늘 민주당에서 벌써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물론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내란으로 확정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김태규 의원도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국회 활동한 지 겨우 4개월째인데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해 버릴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그렇게 땃땃하십니까? 아무 흠결도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올라와야 할 제명 대상 국회의원 이름은 용혜인, 김승원, 장경태, 강선우, 김병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군택 위원님, 어제 김태규 의원이 헌법정신 위반으로 공직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기속된다는 거는 법률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양형 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재판 재개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 유지될 수 있습니까?

또 헌법 104조를 버젓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해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자격 있습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더 큰 무자격 결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은 팍팍한 삶에 지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국회 운영위마저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고 진영논리로 또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는 아직 결산도 하지 않았고 국감 준비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때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입니까?

정중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보실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 흠결이 없다면 이번 제명 결의 안건을 마음껏 상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건 상정은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위원장 한병도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김성희입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더 알아서, 제가 민주당 위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급적 개인에 대한 비판은 삼가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태규 의원의 망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다원주의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을 늘어놓긴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그 근간에는 동료 시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의 총칼에 피 흘린 광주시민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 왔습니다. 이 항쟁의 정신과 의미를 과거에 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5·18을 기념하고 관련 여러 제도를 운영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전두환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5·18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일상화된 규범으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이고 더 품격 있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합의된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제와 편 가르기로 몰아넣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물론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최저선입니다. 국회의원의 태도가 무너지면 그 사회 전체의 품격과 수준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것은 김태규 의원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지, 괜찮아’라고 하시겠냐는 질문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치적 양극화와 극우화의 심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김태규 의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것을 결의안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역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여당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모든 데 적용하고 기준을 삼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내로남불 형태와 편향된 역사의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상영된 ‘암살자(들)’ 보십시오. 근거 없는 음모론, 교묘한 연출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비극을, 역사적 진실까지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20년 전 법원에서도 유사한 영화에 대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 명백하고 악의적인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라고 하시면서 왜 지금처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과거 학생들의 구어나 기업 마케팅에는 수사·징계·불매운동까지 들먹였고 학생들의 인생까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시면서 왜 지금 와서 역사왜곡,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은 6·25 남침 모호화 발언도 했고 북한 정권 옹호성 발언조차, 심각한 역사왜곡과 편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니까? 야당 의원의 발언만 정쟁의 무기로 삼아 역사를 독점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선동이 결코 역사를 왜곡해서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진영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상 검증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사이에 균형을 잡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역사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기관의 입을 막으려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아까 박균택 위원님 드셨나요?

○박균택 위원 예.

국힘 위원님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김민진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명예훼손이라든가 내란음모라든가 내란 선동·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옹호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 발언 태도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겠지요.

진정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확정판결로 결정되고 헌재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또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헌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우리 의원 선서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윤용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언급한 그 내용들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일들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더구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과 헌정을 대상으로 도전행위를 공개적으로 벌이는 사안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공직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최수진 위원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최은석 위원 박 위원님, 박 위원님. 상대방 실명을 거론하지 마세요.

○문금주 위원 얘기 들으세요.

○최수진 위원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남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장내 소란)

○박균택 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들으십시오.

○최은석 위원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세요, 본인 의견만.

○문금주 위원 물었잖아요. 물었잖아요.

○최은석 위원 아니, 본인 의견만 얘기하시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문금주 위원 아니,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박균택 위원 내가 그러니까 그 의견을 국힘 위원님들의 문제점을 의견으로 위원장님께 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통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최수진 위원 평가하지 마십시오.

○최은석 위원 아니, 상대방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만 하세요, 본인 얘기만.

○박균택 위원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에요.

○최은석 위원 왜 위원님들 실명을 계속 그런 식으로 왜……

○박균택 위원 이게 제 얘기이고 위원장님을 향한 제 의사진행발언인 것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상대방……

○문금주 위원 얘기 들으세요.

○박균택 위원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저 위원님들 그러면 결국은……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 위원님들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박균택 위원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범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통합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저런 발언들을 위원장님은 허용하셔도 되는 겁

니까? 3명이 얘기를 했지만 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발언, 본 논리에 어긋나는 발언, 비교할 수 없는 발언, 그 헛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고 통합을 빌미로 계속 감싸고 가겠다는 저런 발언을 하는데……

○윤용근 위원 그게 어떻게 헛된 발언입니까?

○박균택 위원 저건 제2차적인 범죄이고 제2차적인 가해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힘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법사위처럼 하지 마세요. 왜 상대 위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최은석 위원 무슨 망발을 하십니까? 발언권을 왜 제한해요?

○박균택 위원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논리에 안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옹호할 것을 옹호를 해야지요.

○윤용근 위원 왜 엉뚱합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는데?

○위원장 한병도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들……

○박균택 위원 옹호할 것을 옹호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위원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 인정됩니까?

○박균택 위원 무슨 자격이요?

○윤용근 위원 재판 재개만 되면……

○박균택 위원 그건 지금 진행되는 얘기이고.

○윤용근 위원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자격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임기 중에는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윤용근 위원 왜 안 됩니까?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박균택 위원 그 판결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없습니까?

○박균택 위원 그럼요.

○윤용근 위원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박균택 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 확인될 겁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십시오.

○위원장 한병도 발언하실 분들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또 누구 계십니까?

이상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판결 나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상회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상회 위원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거창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론을박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런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론적 책임론을 아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공방 벌이는 것이 프레임의 대결 같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먼저 저는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에서 방송한 그 발언 그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법적·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부담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책임론에 대해서 제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태규 의원이 이야기한 이후에 밝혔던 그런 얘가지요,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는 바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또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이야기하는 ‘암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난투·공방 이런 것들도 그런 잣대로 본다 그러면 상당한 이율배반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반박하면 되는 것이고 부적절하다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언을 비판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제명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의안이 어제 10월 1일에 발의됐고 불과 하루 만에 열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우리는 지금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9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0일 숙려기간을 제외한다는데 이게 과연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루 만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에서 판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 제명은 상당히 무거운 제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인식·책임론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나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굳이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했다 또 이것을 실질적 악의를 통해서 뭔가 주장을 하려 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그러면 먼저 부승찬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참담합니다. 내란이 뭐니까, 내란이? 내란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그것부터 들어가야지요. 비교 수준이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란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겁니다.

우리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의 정당성, 군인은 외부 위협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총부리를 겨누는 그런 것은 뭐니까? 국민을 향하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영토를 향하고 주권을 향한 총부리는 쿠데타입니다.

법을 다 공부하셨지만, 저는 법을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쿠데타하고 일반 사건하고 개인 피해하고 같이 놓습니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아실 겁니다. 김오랑 중령 아십니까? 12·12사태 때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다가 3공수여단 총탄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정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정권입니다, 2014년. 그때까지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2월 자유한국당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합니다. 5·18 관련해서 그때 이종명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5·18 폭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압니까? 제명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뭐니까? 국가폭력을 헌법과 법률로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되는 입헌적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깬다 무너뜨린 전두환·윤석열 행위가 내란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눠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전신이었던 그 당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징계하고 제명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서 희생자들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피해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5·18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95년 11월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저를 비롯한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규 의원의 유튜브 토론 중 발언이 그 진위와 상관 없이 저는 정치인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로 인해 상처받은 5월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서도 진영논리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검열 운운하면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까지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에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짓 주장들을 반복하면서 몰타기 시도를 하려는 모습에 참 참담하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태규 의원을 감싸려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시도를 보면서 일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김태규 의원은 왜 오늘 자신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논의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진숙 의원의 5·18 부정 토론회 그리고 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 이걸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서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말 철회하세요. 누가 기획을 해요!

○**이정현 위원** 내란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김미애 위원** 그게 왜 당이 기획을 했다고 함부로 말해요!

○**이정현 위원**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김미애 위원** 가려서 하시라고요!

○**이정현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역사를 부정하고 판결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김태규 의원은 반드시 제명돼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더 이상 망언과 망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징계해야 합니다.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 거침없이 내뱉은 뒤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 슬며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 벌써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요? 왜 그런 상황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드시는 겁니까? 감싸지만 마시고 그러지 못하도록 말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싸려고 시도할수록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면 동의하는 것이고요. 절대 이 상태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고요?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법복을 벗었다고 법칙까지 벗어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입니까, 아니면 내란 변호인입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에게 반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죄로,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심판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신이 아닌 자기부정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궤변입니다.

국민에게 충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그분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제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우리 당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기획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정현 위원 뭐라고 그랬는데? 뭘 기획했다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이 기획했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정현 위원 사과할 것도 없고요, 속기록 삭제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이 기획했어요? 어떤 근거로 국민의힘이 기획했다고 발언해요?

○이정현 위원 도대체 어떻게 몇 달도 안 돼서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김미애 위원 그게 무슨 기획이에요?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기획해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제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문금주 위원 감싸지만 말고 제명하시면 되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게 무슨 감싸는 거예요?

○문금주 위원 감싸는 거지요, 지금.

○김미애 위원 그것도 정도가 있지요, 정도가.

○박정현 위원 아니, 정도를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겁니까?

○김미애 위원 무슨 당이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문금주 위원 정도가 있어야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게 그렇다고 기획이에요? 각 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발언과 당이 기획했다는 게 어떻게 같이 논의가 됩니까?

○박정현 위원 반헌법적 행위를 헌법기관이 해도 됩니까!

○문금주 위원 내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란을!

○이정현 위원 기획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민주당은 그렇게 기획을 하세요! 우리는 기획 안 해요. 그런 기획 안 합니다. 그런 기획 할 생각도 없고요. 안 해요!

○이정현 위원 기획이 아니라면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똑같이 그런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 없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민주당!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합니다. 헌법 위반했잖아요!

○문금주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한병도 다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요.

○윤용근 위원 헌법 위반하고 있잖아요!

○박균택 위원 뭘 헌법을 위반해!

○윤용근 위원 헌법 위반 안 했습니까? 104조 위반하고 있잖아요, 헌법 104조!

○박균택 위원 헌법 좀 읽어 보세요!

○윤용근 위원 헌법 104조 위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탄핵해야 하지 않아요? 헌법 위반!

○박군택 위원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헌법 조항이나 읽고 얘기하시라고요!

○윤용근 위원 재판받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병도 자, 이주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론 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부정하고 본인 주장하고 있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한병도 이주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님! 들어오셔서 제 발언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어떻게 법조인 출신이 그런 말을 해요?

○윤용근 위원 법조인 출신이 그것도 모르니까?

○박군택 위원 법조인 출신이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법조인 출신이 아닌 거지!

○윤용근 위원 법조인 출신이면 대통령 재판 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윤 위원님!

○위원장 한병도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세요. 윤용근 위원님!

○임미애 위원 윤 위원님,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세요. 윤용근 위원님!

○박군택 위원 턱도 없는 소리 좀 마세요. 헌법 책 읽어 보세요. 헌법 교과서를 읽어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임미애 위원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제 나가요?

○천준호 위원 표결하고 가세요! 도망가지 말고 입장 밝히고 가세요!

○윤용근 위원 헌법 교과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나!

○전용기 위원 헌법대로 하면 국민의힘 해산해야 돼, 해산!

○천준호 위원 도망가지 말고 입장 밝히고 가세요! 도망가지 말고 표결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한병도 이주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가 발언 신청했고요.

○위원장 한병도 아니,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발언을 들으면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위원님이 그래도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다 김태규 의원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제 발언 마저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영화가 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의 표현의 자유를 함께 묶어서 자꾸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검열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에 악의가 없으면 제1야당이 이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께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선제적으로 징계 조치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징계안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토론 중에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론이 아니라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 자꾸 본질 흐리고 감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불과 3년 전에 국민의힘은 5·18과 4·3을 폄훼한 최고위원들한테 당원권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윤리위원장은 반복되는 설화를 심각한 해당행위다라고 규정하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징계 조치도 검토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앞장서고 지도부가 침묵하고 그러니 소속 의원들은 이제 선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바로 그 방임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사과 대신 ‘취지를 왜곡했다’ 이렇게 남탓을 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역사 평가에 성역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수괴·내란수괴로 확정한 사실은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광주시민과 4·3 희생자들 앞에서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 토론이 아니라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방송 들으시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즉시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하십시오. 당원들이 제소한 이진숙 의원 건 지금 바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진정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란을 부정하는 정당에 국민은 다시 기회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수 위원 몇 회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한병도 짧게 말씀하십시오.

○전은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서 너무 아쉬운데요.

김민전·최수진 위원 ‘표현의 자유’로 그냥 옹호했고요, 윤용근 위원 ‘말실수’라고 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김미애 위원이 그나마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실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말실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반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은 토론이 아닙니다. 저희도 항상 나가는 곳인데요. 혹시나 해서 방금 또 확인해 봤는데 진행자에게 그게 토론이었냐 물어봤을 때 토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원내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리고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36분 50초 방송을 했는데요. 시작부터, 7분 47초부터 20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전두환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이요, 아니요?’ ‘내란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법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요?’ ‘법관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기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잠시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전두환 내란이다,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 번째, ‘법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일은 아닙니까?’, 김태규 의원 ‘끝난 일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다툼이 있을 이슈예요, 예를 들면 전두환과 박정희가?’, 김태규 의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논의를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김태규 의원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했습니다.

계속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법원의 판단을…… 진행자들이 믿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고 다시 고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열 번 내내 내란이 아니다, 역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짚었고요. 이 외에도 네다섯 차례가량 5·18에 대해서 계속 언급은 했습니다.

이 부분 말실수입니까? 국힘에서 이게 말실수나 표현의 자유라고 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헌법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국회의원이……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이번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법관으로서 우수법관으로 지정받았다고 그런 자랑까지 했습니다. 저도 울산지방법원 호사회에 있었던 변호사로서 굉장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사과 필요하고 원내수석대변인 자격 박탈해야 하고 제명 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지막으로 천준호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김태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여 전에 이 국회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내란을 종식시켰는데요. 그때 만약에 내란을 막지 못했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정말 큰 걱정이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은 제명 촉구 결의안에 끝까지 참여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어야 합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도 와서 소명했어야 하는데 소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없으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의 발언을 정정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괴한 망발로 또 궤변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명 조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제가 됐던 유튜브 영상에서도, 인터뷰 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자들이 정말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란이 아니라고 수차례 거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실수로 말할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본인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 위원들은 본인이 잘못된 발언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자기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말이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또 냈는데 수정자료는 더 황당합니다. 수정자료의 내용이 5·18에 전두환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자료를 또 냈습니다. 이것은 뭐 말입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용서를 빌어도 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더더욱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고 정당화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소명 기회도 저희가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기회에서조차도 소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더더욱 이 징계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당직자가, 당의 수석대변인이 그런 망발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했어야지요. 적어도 국민에게 사과라도 한마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평과 언급이 일체 없었고 그 당직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고 당의 윤리위원회나 징계 자체를 국회 절차가 진행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오늘 국회 징계 절차에 와서는 그 사람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기획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을 보고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다시 요청드리지만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은 반드시 처리되고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서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가 표시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운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감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만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측 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십시오.

(12시14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2시1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6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가 16표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제안설명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김태규는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다”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하고,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재판 불복’을 노골화하는 법치주의 훼손과 반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김태규는 헌법연구관 및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이자 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고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이자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해당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위원(24인)

김미애 김민전 김성희 김승수 김 윤 김준형 김한규 문금주 박균택 박정현
부승찬 윤용근 이상희 이정현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정점식
천준호 최수진 최은석 한병도

○청가 위원(2인)

윤종오 천하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관 장석립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8.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446)

9월 21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2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600)

9월 29일 회부됨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2026. 10. 1. 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37)

10월 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2026. 9. 28.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584)

9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26. 9. 28.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9월 28일 송부됨